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일자리 · 소득 주도 새 경제모델 시험

한국경제 구조적 · 복합적 위기
저성장 · 양극화 심화

성장률 대신 '착한 성장' 추구

핵심 축 4가지

소득 주도 성장 · 일자리 경제

공정 경제 · 혁신 성장

막대한 재원 마련 물음표

성장 논리 취약 등 한계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향후 5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성을 확고히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을 넘어 대기업 수출 주도 정책에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극화 심화와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 구조를 확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내세웠다.

다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에는 물음표가 남아있다. 아울러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활동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경제정책의 큰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성장 논리가 취약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한국 경제를 '구조적 ·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 우리경제가 저성장이 굳어지고, 양극화만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노믹스'로 표현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나선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취임 100일 동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년 세법개정안' 등에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성장률에도 연연하지 않는 '착한 성장'이란 말도 나왔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한 첫 번째 주춧돌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가계소득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 사례다.

노믹스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일자리 중심 경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 분배 ·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노믹스를 지탱할 또 하나의 축으로 공정 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고 말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전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르면서 강



세월호 피해자 가족 안아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초청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피해자 가족을 포용하고 있다.

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실제 김 위원장 지휘 아래 재벌개혁에 시동을 거는 한편, 가맹거래와 유통거래 분야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새정부가 제시한 경제 패러다임의 마지막 퍼즐은 혁신 성장이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

는 것이다. 새정부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추경과 경제정책방향, 세계개편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청사진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뉴스

文, " '살충제 계란 파동' 총리가 종합관리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대응창구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중복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당 · 정 · 청 회동을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뉴스

추미에 "文대통령, 건국절 논란 '중지부' "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규정할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호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랄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즐기고자 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심지어 (보수 정권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국경교과서로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역사축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하는 것은 혼동과 왜곡으로 정체가 됐던 우리의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한 역사적 정의"라고 평가했다. /뉴스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원 확정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비용으로 2,876억 원을 심의 의결했다.

복구비용 세부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원(국비 1,698억원 · 지방비 747억원), 자체복구비 431억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 · 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과 도로장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 · 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읍 · 면 · 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과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20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뉴스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된다

특정업무경비 등 총액한도내 자율 결정 · 일자리사업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서 제외 등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운용 개편안을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기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와 '전국 4대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 동안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

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 지원하는 사업과 국제행사사업위원회(기재부)가 심의 · 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부는 재무관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할 계획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뉴스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은 교육당에서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호지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